



## 한미 FTA와 서민금융

河 駿 垆 (研究委員, 3705-6348)

금융개방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서민금융의 애로를 야기하는 시장실패의 종류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름. 즉, 불안전경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서민금융 문제는 현지화를 전제로 한 금융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, 외부성 및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. 따라서 FTA에서 공공성이 큰 부문에 대한 정부의 특혜부여를 인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.

-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라 금융개방이 확대될 경우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.
  - 이는 국제자본은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대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수익성과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만 관심이 있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됨.
  -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한 금융개방 과정에서 금융의 단기보수화로 서민금융과 관련한 시장실패(market failure)가 심화되었다는 인식도 존재함.
- 그러나 금융개방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서민금융의 애로를 야기한 시장실패의 종류, 그리고 금융개방의 방식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.
  - 예컨대 서민금융의 애로요인이 불안전경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또는 외부성문제 이냐에 따라 금융개방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됨.
  - 아울러 금융개방이 상업적 주재를 통한 현지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국경간거래를 통한 단기자본 이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다른 효과가 나타남.
- 먼저 불안전경쟁 문제와 관련해서는, 금융개방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금의 과소공급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서민금융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.
  -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비스 개선, 대출금리 하락, 자금의 이용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.



-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중소형 서민금융기관이 도태되면 단기적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.
  
- 다음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관련해서는, 금융개방이 상업적 주재를 통한 현지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선진 대출심사기법의 도입으로 서민금융에 도움이 될 수 있음.
  - 선진 금융기법이 전수되고 국내 대출심사기법 개발이 촉진되면, 성장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부족으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부문에 자금이 좀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음.
  
- 반면에 외부성 문제와 관련해서는, 국제자본이 서민금융의 사회적 수익률(또는 공공성)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개방이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음.
  -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적 수익률(상업성)뿐만 아니라 서민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외부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수익률(공공성)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, 국제자본은 사회적 수익률을 감안할 유인이 크지 않음.
    - \*예컨대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의 경제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금융은 해당 경제활동의 사적 수익은 미미하더라도 국가의 인프라 유지 및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수익은 클 수 있음.
  
- 따라서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는 경쟁촉진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이점은 충분히 취하되 공공성과 관련된 서민금융의 위축 가능성을 극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.
  -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어 현지화되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경쟁 및 단기화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함.
  -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등 특혜가 가능하도록 유보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.
    - \*예컨대 공공성이 인정되는,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정부의 특혜 부여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음.
    - \*이와 관련해서 미국도 주택대부시장, 농업금융시장, 학자금융자시장 등에 대하여 정부가 세제, 감독, 자금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